

##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가능성 분석 - 일본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이수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일본학과 석사과정)

- I. 문제의식
- II. 공동 역사교과서의 성공조건
- III. 성공가능성: 국제환경과 정치적 리더십
  - 1. 국제환경
  - 2. 정치적 리더십
- IV. 성공의 한계점과 대응방안
  - 1. 한계점
  - 2. 대응방안
- V. 맺음말

### 초 록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아마도 2009년 일본에서 '선거개혁'이라 불릴 정도로 이슈가 된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의 외교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탈아(脫亞)를 선언 해 왔다. 그런 일본이 '아시아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다.

2007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외환 위기인 1997년에도 있었으나 그때까지는 아시아 밖의 지역과의 관계가 더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세계경제위기 이후 아시아는 세계무대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 올림픽 이후 개방과 개혁으로 급성장한 중국과, 패전 후 5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탈미입아(脫美入亞)'를 선언한 일본을 통해 아시아의 기조(基調)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은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으로 아직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나 공동체 구성의 실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진은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일본의 외상 오카다가쓰야(岡田克也)가 '한·중·일 역사교과서 공동 편찬'을 제안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가 중심이 되는 통합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의 공동편찬은 3국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5년 발간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공의 대화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 줄 시기이며 이 연구가 시작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I. 문제의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되어 온 세계의 블록화 현상은 자유주의(Liberalism)의 힘을 얻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좀 더 강하게 퍼져나갔다. 지난10월, 유럽연합(EU)은 체코가 리스본 조약 비준안 서명을 시사(示唆)하면서 현재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협력과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탈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지역 공동체 구성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협력이 정치·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 사회·경제적 협력과 교류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창설과 같은 경제적 지역주의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세안(ASEAN)+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특히, 2007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무역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정치·안보의 다자주의 체제로의 움직임을 보였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로 개방개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2009년 8월, 54년 만에 패전 후 처음으로 정권이 바뀌는 등 아시아의 기조(基調)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 일본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주장은 지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공동통화 등 긍정적으로 검토 될 분위기이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나 공동체 구성의 실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은 미진했다. 이는 무엇보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민족주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 점이 지역을 하나로 묶는 ‘지역적 연대감’과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7일 일본의 외상 오카다가쓰야(岡田克也)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편찬하는 것이 역사 문제에 대한 논쟁을 결론짓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해 한·중·일 역사교과서 공동 편찬을 조심스레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한·중의 학자들은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본 국내 우익과 국민들은 ‘매국노’라고 비난하며 반발을 하고 있다. 이전에도 역사교과서 공동 편찬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 일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본 민주당의 ‘아시아로 돌아가자’는 방침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본의 ‘아시아 외교’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자민당 정권하에 ‘탈아(脫亞)’를 선언하며 주변국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역사배상문제, 영토문제, 역사왜곡, 우익교과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면서도 주변국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본은 아시아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공감대를 찾는 것만큼 손쉬운 방법도 없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가 중심이 되는 통합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관계학의 Tit-for-Tat<sup>1)</sup> 전략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국가 간의 관계는 ‘전략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면, 언제든지 약속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선행과제로써 ‘신뢰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하나가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시각의 다각화’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sup>2)</sup>’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공동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즉, 상호성(Reciprocity) 전략. 전략적 성격의 단계: Be Nice-Be Retaliatory-Be Forgiving-Be Consistent 순.

2) Edward.Hallett.Carr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말한 ‘역사의 정의’.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카다가 발언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럽의 교과서 개선과 공동제작의 모델을 통해 성공조건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일본의 국내외적 환경을 통해 성공 가능성과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성공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공동 역사교과서의 성공조건

이미 한·중·일 3국은 2005년 5월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공동 역사교과서를 출간했다. 3국이 역사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추구한 점에서 동아시아 다자간 역사 대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와 교육자들은 그 내용과 과정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3국만큼이나 비극적이고 복잡한 역사를 풀어나가는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공동 역사 교과서 과정을 살펴보고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의 성공조건을 알아보겠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공동 역사교과서는 이미 3권이 발간되었다. 고대 그리스·로마 역사부터 프랑스 혁명 및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는 1815년까지가 제1권, 프랑스 혁명 이후 빈체제에서 1945년 2차 대전 종전까지 제2권, 1945년부터 현재까지가 제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0~1930년대부터 양국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역사학자와 역사 교육 관련자들은 지속적으로 역사교과서 협력 활동을 전개 해 왔다. 그리고 2003년 엘리제 조약<sup>3)</sup>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독·프 청소년 의회는 양국 정상에게 독·프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을 요청했다. 양국 정부는 교육부 및 외교부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된 독·프 역사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발족했다. 편찬위원회는 양국의 역사 교육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후 ‘편찬지침’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의 감독 하에 공모를 통해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3권을 제작 할 출판사를 선정하고, 편집책임자와 상대국 언어에 능통한 5명의 현직 교사를 집필자로 임명했다. 양국의 상이한 학교 구조, 교육과정, 교과서 형식상의 차이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sup>4)</sup>, 각자의 언어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교과서가 제작되어 매년 약 1만권(평균적인 교과서 판매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판매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는 장기간의 식민지 지배, 두 차례 전쟁에서의 막대한 피해, 영토문제로 인해 상호 적대적인 두 민족이 체제와 이데올로기, 군사동맹, 경제력의 차이를 넘어 역사적 화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또 교과서 협력에서도 ‘교과서 교차분석→권고안 작성을 통한 교과서 수정→쟁점에 대한 공동학술연구→수업개선을 위한 교사용 안내서 발간’이라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교과서 개선 활동의 계기는 빌리브란트의 신동방정책<sup>5)</sup>과 바르샤바조약을 통해 형성된

3) 프랑스 화해 협력조약이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과 독일(당시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63년 1월 22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맺은 독일·프랑스 화해협력조약. 제2차대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 정상들은 40년 동안 매년 두 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열고 있으며 해마다 15만 명의 청소년을 교류시키는 등 청소년, 문화, 학술, 과학 교류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두산백과]

4) 볼프 비텐브로크, 「독일 프랑스 간 역사교과서 협의와 공동 교과서 편찬 경위 『역사 교과서 경험 공유와 동아시아 협력 모델 찾기』 2006, p.171-172.

	독일	프랑스
교육과정	16개 주마다 다름	전국적으로 단일
교과서 형식상의 차이	주제중심 서술지향	연대기적 서술지향

5) 빌리브란트는 나치시절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는 정치 활동을 했다. 이어 1969~1974년 독일의 제 4대 연방 총리로 재임했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를 살려 폴란드에 대한 독일의 침략성과 억압성을 인정하며, 상호 교류와 교차적인 분석을 통해 양국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를 개선하자는 의견교환에서 시작되었다. 독일과 폴란드 교과서 개선 활동을 주도한 교과서 위원회의 기반이 되는 3개의 조직과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sup>6)</sup>

첫째, 국제교과서 연구소는 위원회의 상세한 내용, 참석자들의 소집, 주제설정 등을 담당하여 위원회 활동을 실제적으로 주도하였다. 둘째, 유네스코 독일 위원회는 위원장이 교과서 위원장을 겸임하여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결정함으로써 연방 및 주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 하였다. 셋째, 서독 외무부는 교과서위원회와 학술회의의 여비와 출판비를 지원하는 등 위원회의 재정적·정치적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폴란드에서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양국의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매년 한차례의 학술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며 양국관계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양국의 연구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1981년부터 시작하여 교과서와 수업의 개선을 위한 역사교수법을 담은 교사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한편 2006년부터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의 영향을 받아 독일 외교부 장관이 독일-폴란드 공동 역사교과서 제작을 제안하여 학자들을 구성하고, 2007년 시험판을 1000부 제작하여 독일의 작센과 폴란드의 슐레지엔의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사용 중이다.

위의 두 모델을 통해 공동 역사교과서의 성공조건을 도출해 보면,

첫째, 교과서 대화를 지원하거나 최소한 용인하는 정치적 환경의 마련.

둘째, 양국정부 수상 등 리더-정치엘리트-의 존재.

셋째, 대표성을 위임받는 교과서 협의회의 존재.

넷째, 역사교육의 목표가 민족주의적 정체성보다 자국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둬.

이상 네 가지로 크게 결론지어 본다.

한 중, 일 3국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지만, 위의 네 가지 성공 조건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교과서 프로젝트의 실현을 전망해 보면 가능성이 희박하기만하다. 침략과 식민지배 등 불의에 대한 책임 불인정, 현재의 영토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 등으로 교과서 협력을 촉진하는 정치적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5년 발간된 3국의 공동 역사 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도 이러한 조건하에 만들어져 미흡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수·우익을 상징하는 자민당 정권이 몰락하고, 전후 54년 만에 민주당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으로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어 수상인 하토야마가 동아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외무상을 맡고 있는 오카다 역시 ‘공동 역사교과서’ 발언을 하며 그동안 역사배상 및 공동의 연구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의 두 사례로 본 성공조건 네 가지를 통해 일본에서 오카다의 ‘공동 역사교과서’ 발언이 현실화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성공가능성: 국제환경과 정치적 리더십

다. 그동안 공산주의 국가들과 화해를 시도하는 동방정책을 실시하는 업적을 남겼으며, 71년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위키피디아]

6) 서현주, ‘교과서 개선 혹은 공동제작을 통한 역사화해 노력의 사례’, 『역사화해와 교과서』, 동북아역사재단.

## 1. 국제환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sup>7)</sup>(Brethon woods) 회의와 같은 제2의 브레튼 우즈 회의가 필요하다’<sup>8)</sup>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위기 이후 G20등의 회의를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세계화를 실감하게 된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화와 블록화 현상은 강조하지 않아도 이해 할 것이다. 현재 지구 사회에서 지역 단위로 행동하고 있는 정치경제 행위자는 EU만이 아니다. 비록 제도화 정도는 아직 EU에 못 미치지만 북미주, 동남아, 중동, 남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sup>9)</sup> 지역주의와 지역 통합은 이제 전 세계적 대세인 것이다.<sup>10)</sup>

1980~1990년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이 지역의 ‘최대 투자처’ 및 ‘공장’으로 부상하며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 그 결과 역내 국가들 간의 투자와 무역의 순환구조는 역내 경제의존도를 꾸준히 증대시켜나갔다. 1990년대 초 이렇게 진전된 기능적 의미의 지역경제통합을 오늘날의 EU나 NAFTA등과 같은 제도적 의미의 통합으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동아시아지역은 미국과 같은 서방세력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꿈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의 잔재와 안보에 대한 ‘미국 맹신’의 결과인 것이다. 오늘날 국가 간 군사·안보적 갈등이 약화된 가운데 사회·경제적 협력과 교류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와 국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곳에 즉시 전달되는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sup>11)</sup> 이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탈냉전이 세계화를 가져왔다.’ 혹은 ‘세계화가 냉전의 종식을 초래했다.’라는 상반된 시각이 있지만, 결국 현재 우리는 상호의존성이 강화된 세계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세계금융위기와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 지구적, 동시다발적 현상을 보면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19일, 그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하는 중대발언을 했다. 오바마는 미국을 태평양국가로서 정의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新아시아 정책 구상<sup>12)</sup>’을 일본에서 연설하였다. 지난 10년, 특히 부시정부 8년 동안 ‘아시아는 언제나 중동에 밀렸다’라는 평가와 비교하면, 이미 역사 무대에 아시아의 등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바마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간 것이다.

또한 그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소비경제는 줄어 들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를 키워야 할 것이다.’라는 솔직하면서도 일침을 가하는 발언을 했다. 다시 말하면 공생(共生)을 말하면서 미국의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시아 국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성장과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의 새로운 경제와 정치의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아시아 국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세계에 주목이 되고 있다. 이는 이미 아시아 국가에 많은 공장과 무역을 펼친 일본에 있어서도 아시아권의 경제 강국임에도 지역 내에서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세계적, 동아시아

7)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협의하에 탄생되었다.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의 실시하였다.

8)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중앙일보 해외칼럼, 2009.11.16.

9) NAFTA, ASEAN,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같이 비교적 잘 알려진 지역행위자 외에도 남미 국가연합(SACN), 걸프협력회의(GCC),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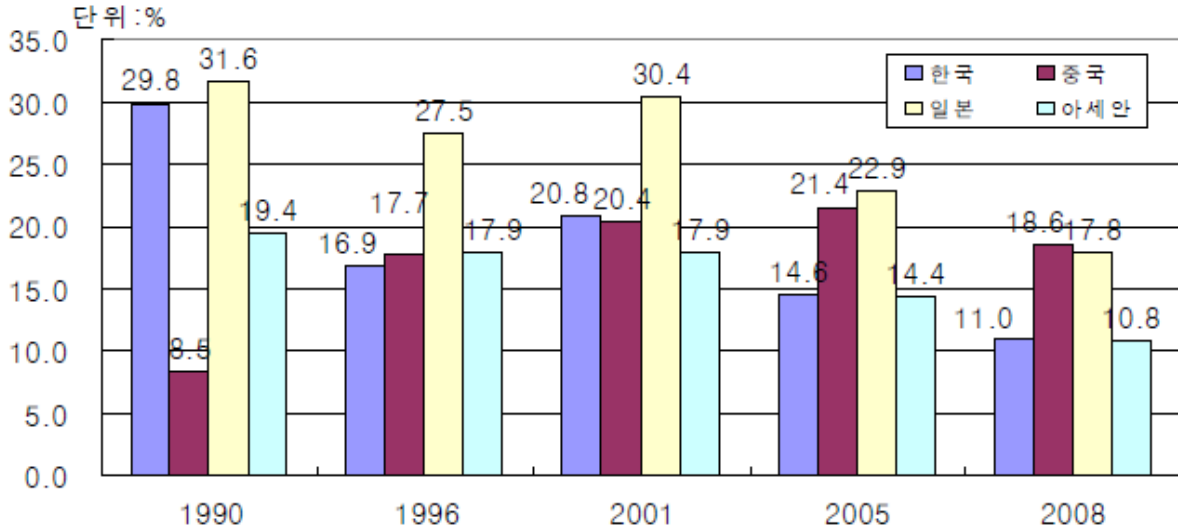
10) 최태욱, 「동양평화론의 21세기적 계승: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10.22.

11) 이승철 외,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7, p22.

12) 중국과의 실용적 동반자 관계, 북한의 비핵화 실현, 16개국 참가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협력 등.

아 지역적 흐름이다.

[그림 1] 동아시아의 對미 수출 의존도



자료; KITA DB<sup>13)</sup>

[표 1] 동아시아의 역내 수출구조

	미국			중국			아세안+3			아세안+3+홍콩+대만		
	1996	2001	2008	1996	2001	2008	1996	2001	2008	1996	2001	2008
한국	15.9	20.8	11.0	8.2	12.0	21.4	34.4	33.9	39.6	45.5	44.6	47.3
일본	27.5	30.4	17.8	5.3	7.7	16.0	30.3	27.4	36.8	43.1	39.6	47.9
중국	17.7	20.4	18.6				32.2	28.6	20.9	56.0	48.2	35.7
아세안	17.9	17.9	10.8	2.9	4.3	9.6	45.7	44.2	49.5	55.1	53.9	58.0
아세안+3	21.4	23.0	15.4	4.1	5.5	8.5	36.2	33.8	34.2	49.2	46.7	45.7
아세안+3+ 홍콩+대만	21.5	23.0	15.3	7.9	9.2	12.9	37.2	35.5	37.5	49.8	48.4	50.4

자료; IMF, Statistics DB.

이처럼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독일-폴란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빌리브란트의 신동방정책과 바르샤바조약을 통해 형성된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가 공동 역사교과서의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른 경제블록화 흐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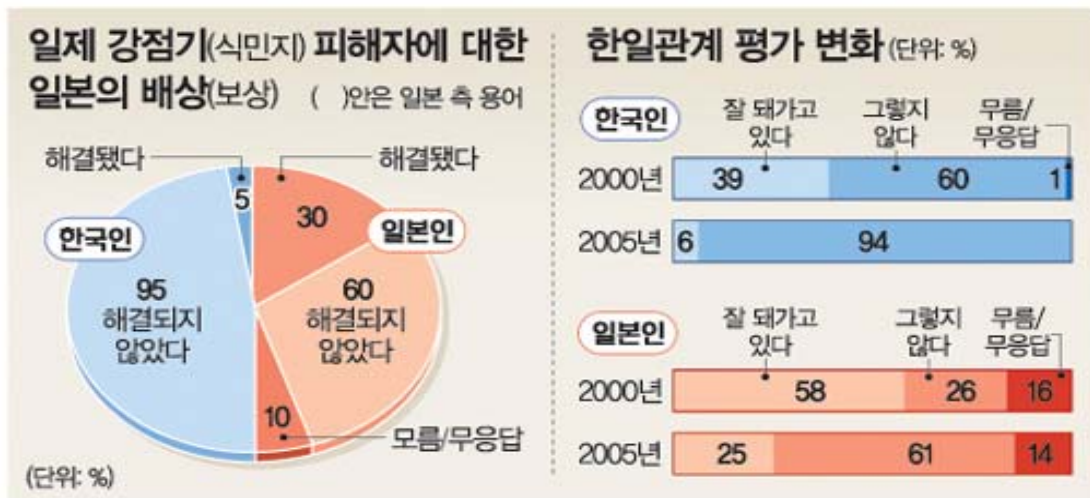
13) 박변순, 「아세안+3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9.10.22.

## 2. 정치적 리더십

일본 민주당의 압승<sup>14)</sup>은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 못지않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자민당의 패배의 원인으로 고이즈미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빈부 격차, 전후 최악의 실업률, 장기 불황속의 디플레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경제 불황도 많았고, 인기가 바닥에 떨어진 총리도 있었다. 그래도 자민당은 정권을 유지해 왔다. 그렇다면 자민당 패배의 원인은 더 근본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 3년 사이 세 번의 총리를 바꾼 ‘리더십의 부재’라는 문제를 포함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일본국민들도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온 것처럼 21세기 새로운 변화를 꿈꾸었던 것이다. 때마침 그들에게 하토야마가 나타났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새로운 일본의 비전을 제시했다. 자민당 정부에 희망을 잃어버린 일본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비전이었던 것이다.

2009년 반세기동안 장기집권한 자민당정권이 무너졌다. 이는 ‘선거혁명’이라 불릴 정도이다. 1955년 자민당 설립 후 사실상 정권교체는 없었다. 일시적으로 93년 자민당이 의석의 과반확보에 실패하여 정권을 잠시 내주기도 했지만, 자민당은 여전히 제 1당으로 건재했고, 군소 정당의 연립정권은 구심점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 국민은 정권교체를 체감하지 못했으며, 정권교체 8개월 만에 자민당은 사회당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에 복귀하고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다.

[그림 2] 한일관계평가조사



자료; 동아일보 여론조사 2005년 6월 1일

이전 자민당 정권하에서 2005년 對아시아관계가 對미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공식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상 對미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군사화 될수록 일본과 아시아 이웃나라 사이의 골은 한층 넓고 깊어졌다. 이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체를 찾아가는 과정에 20세기 제국주의와 전쟁의 유산이 계속 들러붙어 방해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실현되려면 일본과 아시아 불화가 치유되어야 하는데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재임동안 도리어 더 심화되었다.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는 1965년과 1972년에

14) 민주당은 480석 중에서 309석을 획득하였고, 반면 자민당은 그동안 기본이었던 220석도 못 미치는 119석을 얻었다. 자민당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줄었으며, 종래의 자민당을 능가하는 강력한 민주당이 등장했다.

각각 정상화 된 이래 최악의 상태였다. 특히 한국과 1990년대 정부 간 과거의 갈등을 접어두자는 협약이 거의 성사되기 일보직전처럼 보였으나, 고이즈미 집권기간 더욱 전쟁의 유산과 관련된 격렬한 논전이 휘몰아쳤으며, 야스쿠니신사 방문과 독도영유권논쟁으로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노선이었다. 야스쿠니 이외에도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동중국해의 자원이용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 또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항의를 부적절한 내정간섭이라 규정하고 거부함에 따라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재임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sup>15)</sup>

[표 2] 2006년 한일 양국의 신뢰도 조사

양국 신뢰도	한국 → 일본	일본 → 한국
신뢰할 수 없다	88.6% <sup>16)</sup>	51.2%
신뢰 한다	10.9%	43.4%

자료; 한일국민의식 공동여론조사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 2006년 8월 7일자

[표 3] 2006년 한일 양국의 주변국 호감도 조사

주변국의 호감도	高 -----> 低	
	한국	중국 > 미국 > 러시아 > 북한 > <b>일본(17.1%)</b>
일본	<b>미국(70.1%)</b> > 한국(44.5%) > . . . > 북한(0.4%)	

자료; 한일국민의식 공동여론조사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 2006년 8월 7일자<sup>17)</sup>

2005년 당시 중국인의 고작 6%만이 일본에 ‘우호적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 <sup>18)</sup> 이처럼 동아시아 주변국들에게 일본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우애’의 정신-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共生)-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하토야마가 나타났다. 하토야마는 '일본이 아시아를 떠나 있던 과거를 반성하고 아시아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아시아관 유럽연합 창설의 선도적 역할을 설정했다. 그는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 ‘영주권을 가진 재일한국 동포들에게 지방 참정권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가치관이 다른 북한의 체제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혁신적인 민주당의 정치, 외교·안보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표4]통해 제시한다.

[표 4] 민주당 개혁 정책

내각	전후 과제에 대한 대응 <sup>19)</sup>
----	-----------------------------

15) 개변매코백, 『종속국가 일본』, 창비,2008, p163.

16) 2005년 6월 10일자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 공동조사에서는 한국인들 중 90%가 일본을 신뢰하지 않음.

17) 한국측 조사는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은 ㈜미디어리서치가, 일본측은 요미우리신문 자체의 세론(世論·여론)조사부가 각각 맡았다. 한국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1,000명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거주지역별, 학력별, 소득별 등의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추출, 질문지를 제시하는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도 만 20세 이상 1,867명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 한국측 조사는 6월22~7월3일, 일본측 조사는 7월8, 9일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한국측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18) 「중국반일 테모의 배경」 『世界』 2005년 6월, p.21~24.



	야스쿠니 문제 국립 추도시설의 건립 <sup>20)</sup>
행정개혁	낙하산 인사 개혁, 독립행정법인 개혁
정치개혁	세습정치로부터의 탈피 <sup>21)</sup> 중의원정수 80삭감 <sup>22)</sup>
외무·방위	새로운 시대의 일미동맹의 확립 <sup>23)</sup> 아시아 외교의 강화 <sup>24)</sup>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 <sup>25)</sup> 일중관계의 심화 <sup>26)</sup> 영토문제의 조기 해결 <sup>27)</sup>

자료; 日민주당 정책집,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위의 민주당정책을 보면 구조개혁을 통한 국내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아시아외교’를 향한 역사문제와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일본을 제시한다.

19세기 일본은 ‘탈아(脫亞)를 선언했다. 우주의 중심인 천황의 직접후손에 해당하는 유일한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아시아로부터 결별하기로 한 것이다.<sup>28)</sup> 이 근본적인 정체성의 문제와 美군정기에 교묘하게 이루어진 對미의존성이 일본사회에 구조적으로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었다. 따라서 고이즈미가 아시아 이웃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은 관심 없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일본이 2009년 ‘탈미입아(脫美入亞)’를 선언한 것이다.([표4]참고)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추구하고, 동아시아의 번영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국들에게 민주당 ‘선거개혁’만큼이나 충격적이고도 반가운 일이다. 앞의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나타난 ‘세계화의 흐름’과

19) 국회 도서관에 영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립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며,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미지불 임금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계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20) 야스쿠니(靖国)신사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나 각료가 공식참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감 없이 전몰자를 추도하고, 반전·평화를 맹세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 정치 분야에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삼촌이내의 친족이 해당의원과 동일선거구에서 연속하여 입후보하는 경우 2009년 총선부터 민주당의 규칙에 의하여 이 친족을 공인하지 않겠습니다.

22) 정권선택이 가능한 선거를 실현하고, 소선거구 선거를 보다 중시하는 관점에서 중의원 비례의석 180중 80의석을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1표의 격차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수배분”(소선거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47개 도도부현에 1의석씩 배분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소선거구 모두를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격차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솔직하게 대화하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가겠습니다. 미국과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일 미지위협정의 개정을 제기하고 미군재편과 주일미군기지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24)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난 구호, 감염방지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축을켈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시아축을켈평양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투자축을노동이나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 경제연계협정(EPA)축을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 한국은 6자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하며, 양호한 한일관계의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중일 3개국의 강력한 신뢰,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가겠습니다. 한일 FTA 체결과 독도 문제의 해결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26) 양국 간에는 식품안전, 인권, 환경, 에너지, 군사력의 투명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국정상 간의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6자회담이나 북중 간에 중국이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재촉하겠습니다.

27) 영토문제의 해결은 끈란을 동반하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이 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의 빠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28) 개빈매코맥, 『중속국가 일본』, 창비,2008.

아시아의 부상'을 일본(민주당 정권)이 인지한 결과이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독·프 청소년 의회가 양국 정상에게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을 요청하여 양국 정부가 실천에 옮겨 성공으로 이루어냈듯이 리더의 역할은 매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빠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리더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식민지 만행의 역사기억과 19세기 일본의 '탈아(脫亞)'의 자세, 외환위기이후에도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자국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본에 대한 모습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 리더의 필요성을 인지<sup>29)</sup>하면서도 하토야마에게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동 역사교과서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여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IV. 성공의 한계점과 대응방안

### 1. 한계점

한·중·일 3국간의 교류는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70년대 이후 역사교육교류는 '인적교류'에서 '교과서대화'로 발전하였고, 몇몇의 한·일 공동 교과서가 출간되었다.<sup>30)</sup> 2005년에는 한·중·일 3국의 시민, 교육자, 학자들이 함께 출간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미래를 여는 역사』<sup>31)</sup>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대중서에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왜 교과서(부교재) 및 교사용 수업자료로 쓰이지 못한 것일까? 그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앞에서 언급한 공동 역사교과서의 성공조건 네 가지가 미약하게 존재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교과서는 삼국간의 역사대화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성공조건을 재점검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환경'과 '리더십의 존재'라는 성공조건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협의체의 존재'와 '자국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성공조건이 그 한계점을 2005년 『미래를 여는 역사』와 당시 일본 내의 역사 교육 및 역사인식을 토대로 정리하고 그 밖에 한계점도 알아본다.

첫째, 유럽의 성공사례와는 달리 한·중·일 대표성을 띄는 협의체 부재의 문제이다. 『미래를 여는 역사』의 연구 및 발간 당시, 한국에서는 연구자, 교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일본은 교과서 전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참여 하였다. 반면 중국은 시민차원 단체가 없었으므로 중국 사회과학원과 항일 전쟁기념관 관련 연구자가 참여한 형태이다. 따라서 역사 대화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또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특히 3국의 근현대사를 체계적으로 저술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목차를 구성하고 합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생소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대사 분량이 간략한 것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전

29)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수상과 故 전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이들에 의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공헌한 양대 지도자로 평가된다. (최태욱, 「동양평화론의 21세기적 계승: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10.22.) 이후 그러나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리더가 나오지 않았다.

30) 박중현, 「공동 교과서를 통해 본 대화와 갈등」.

31) 2002년 난징에서 열린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포럼'에서 교재 발간에 합의하고, 11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쳐 출간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 부교재로 채택하여 삼국 청소년들이 타국의 역사와 상호 관계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독자로서 일반인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체적으로 3국이 분량을 균형 배분하여 서술한 점은 내용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다. 32) 거기에 내용뿐만 아니라 삼국의 서술방식의 상이함이 나타났다. 한국은 사실을 친절하게 나열하며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며, 일본은 함축적인 서술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중국은 현장감을 살리며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어떤 것이 옳은 방식인지는 단언할 수 없고, 역사인식의 면과 달리 역사 서술에 있어서 획일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야 하는가하는 ‘방법론적인 측면’도 중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는 대표성을 띄는 협의체의 부재로 인해 교과서 협의 절차상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가 바로 책으로 드러난 것이다.

둘째, 자민당 정권하의 역사교육의 목표가 ‘민족주의적 정체성확보’에 있다는 점이다. 패전 이후 GHQ<sup>33)</sup>의 일본 점령 정책은 일본의 군국주의 해체와 민주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때 민주화 추진의 5대 지령<sup>34)</sup> 중 ‘교육제도 개혁’이 여기에 속한다.<sup>35)</sup>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총리들은 모두 전시교육의 정신을 뒷받침하는 천황 교육칙어에 존경과 찬사를 표해왔다.

1990년대 집단 따돌림, 자살, 폭력 등의 청소년 범죄가 우려의 대상이 되었고, 관료들과 보수적인 사상가들은 이를 미국식 혹은 영국식의 제도에서 온 것이라 여기며, 교육의 위기를 제도의 피로와 국민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상실로 해석했다. 따라서 90년대 들어 그들은 공적 정신, 도덕, 애국심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언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후 국민적 자부심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도록 교과서의 채택을 촉구하며 교육기본법 개정을 거론하기 시작했다.<sup>36)</sup>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결국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sup>37)</sup>이다. 여기에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국정제도를 검정제도로 전환시킨 점이, 오히려 ‘새역모’를 비롯한 역사왜곡 및 우익 교과서가 탄생하는데 발판이 된다.<sup>38)</sup>

이밖에도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파 정당 출신이 지자체장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색깔과 맞는 교육위원을 선발한 결과 교육 현장에도 보수화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국기 국가법에 의해 학교 행사에서 히노마루 게양, 기미가요<sup>39)</sup> 제창이 의무화 되어 지키지 않거나 거부한 교사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40)

이러한 일본의 민족주의적 교육의 모습은 다양한 관계와 공생(共生)을 강조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계속 되어왔다.

셋째, 두 가지 한계점 이외에도 하토야마가 다양한 색깔의 연합체인 민주당을 어떻게 묶어갈 것인가

32) 남궁원, 「서평, 미래를 여는 역사」, 『역사교육』 2005.

김인호, 「미래를 여는 역사, 민중의 삶을 통해서 그린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 『호서사학』 2005.

신주백, 「‘동아시아형 교과서 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 모델 찾기 (1993~2006)」, 『역사교육』 101집, 2007.

33) 연합국 총사령부 (General Headquarters of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포츠담 선언 및 항복문서에 입각한 대일점령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45년 8월 일본 요코하마[横浜]에 설치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기관.

34) 1. 남녀 평등에 입각한 부인 참정권 확립, 2.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3. 교육제도개혁, 4. 치안유지법, 특별고등 경찰제 등의 압제적 제도의 철폐 5. 차별해체, 농지개혁 등 경제민주화. 그 외에도 언론의 자유, 지방자치제도 추진.

35) 조용래, 논형, 『천황제 코드』, (2009), P.221.

36) 개변매코맥, 창비, 『종속국가 일본』, 2008.P.237.

37) 새역모의 직접적인 계기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비난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잔학한 민족의 자손이라는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자학사관논쟁으로 비하되었고, 우익인사들은 '자유주의 사관'연구회를 만들었다. 이후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1996년 12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8) 시간이 지나면서 문부성의 검정이 강화되는 등 교과서 내용을 국가가 통제하게 되었다.

39) 일본의 이웃들에게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유럽의 갈고리십자와 “세계에서 으뜸가는 독일”이라는 가사만큼이나 제국주의와 전쟁, 침략의 상징이다.

40) “2006년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의 도쿄 교사들이 징계조치에 직면했다.” 개변매코맥, 『종속국가 일본』

창비, 2008.P.241.

하는 문제도 한계로 제기된다. 하토야마나 오자와 대표 대행은 자민당과별에 속했던 보수 정치가이다. 반면 옛 사회당 출신이나 일본 최대 노조 ‘레고(聯合)’ 출신의 진보 성향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이념 분포는 다양하다. 그 때문에 하토야마의 ‘對미 대등 외교’나 ‘비핵 3원칙 견지’ ‘야스쿠니 신사 대체 추도 시설 건설’ 공약을 의문시하는 소리가 높다. 또한 하토야마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자민당 정권의 재집권 가능성과 민주당의 개혁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표 5]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하토야마 지지율 변화

9/ 16.17 취임직후	71%
10/ 1.12	65%
11/ 14,15	62%

자료: 아사히신문 11월 16일자 조선닷컴 연합뉴스 11월 16일 옮김

아사히신문은 “1993년 8월 자민당이 총선에서 제1당을 고수했지만,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뒤 8개월 만에 퇴진한 호소카와 전 총리와 기묘하게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의 조사를 기준으로 “호소카와 정권의 지지율은 발족 직후에는 71%로 하토야마 내각과 똑같았고, 4개월 후에는 60%로 하락했다. 하토야마 내각도 두 달 뒤에 이런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 2. 대응방안

지금까지 오카다 외상의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언에 대한 일본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의 국제환경과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 『미래를 여는 역사』의 문제점을 통한 한계와 패전이후 자민당하의 민족주의적 역사교육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있어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는 몇 가지의 전제와 노력이 필요로 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선, 독일과 폴란드의 유형이 그러했듯이 교과서의 대화를 이끄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충족된다. 즉,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내와 일본에서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이제껏 주변국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일본에게 역사의 문제가 단순히 사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한 계기가 된 것이다. 41)

여기에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목표로 하는 하토야마가 변화하고자 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하토야마와 외교·역사의식을 같이 하는 또 하나의 인물 ‘오카다’가 있다. 그는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2)그가 이렇게 발언한 데에는 한국과 중국에 우호적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더불어 주변국들의 부상에 따른 일본의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적 환경변화와 리더가 교과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41) 지난 10월 29일 열린 ‘일본의 변화와 동아시아’국제 세미나에서 일본“경제공동체부터 만들자”..한국과 중국은 “신뢰회복부터..”라는 의견을 보였다.

42) 재일한국인을 필두로 하는 ‘영주 외국인 주민의 법적지위 향상을 추진하는 의원연맹’ 회장, 민주당의 ‘한일의원 교류위원회’ 고문, ‘베이징 올림픽을 지원하는 의원모임’ 부회장, ‘NGO해외활동 추진의원연맹’에서 일할 정도로 한국과 중국 주변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日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공식 홈페이지 <http://katsuya.net/>).

첫째, 2005년 『미래를 여는 역사』의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 전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획-재정에 해당하는 산하 기구 또는 이와 같은 일을 분담해서 할 동등한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실행한 후에는 ‘권고안’ 또는 ‘지침서’의 형태로 3국 공통의 룰(rule)-내용과 서술방식을 포함한-을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3국의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통하여 기준이나 지침서에 맞게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둘째, 자민당 정권하의 민족주의적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문과성의 검정시스템 재고가 요구된다. 검정결과를 공개하고 교과서 전시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과서 왜곡이라는 주변국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 역사교과서를 모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의 ‘인증제’ 혹은 ‘국정제’의 예외사항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혹은 개선된 검정제도 하에서 독일, 영국, 미국과 같이 무상으로 교과서를 배포<sup>43)</sup> 혹은 대여하여줌으로써 전국적 사용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셋째, 민주당 정책집의 처음에 제시된 ‘NPO활동 및 지원세제에 관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일본 내의 비영리 섹터<sup>44)</sup>의 육성을 지원하여 야스쿠니신사 국영화 반대투쟁에 앞장서 온 ‘정교분리 운동’과 ‘새역모’가 만든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을 하는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21’ 등 시민단체의 양적 팽창과 이슈의 다양화가 일본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지게 해야 한다.

또 지난 정권에서 애국심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적인 언론 캠페인을 시작했듯이 세계인·동아시아인이라는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언론을 통해 국민 스스로 성숙한 역사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하토야마 정권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하토야마의 더욱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다. 즉 하토야마의 정치 철학을 우선 민주당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주당의 의견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반세기동안 고질병과 같은 ‘관료주도 시스템’과 ‘국민연금제도’, ‘개호보호’등의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개선 및 구축 등의 형태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동안 일본인들의 경제적 자부심과 자존심은 대단했다. 따라서 경제 침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민족주의’라는 형태로 되살아나지 않도록 경제회복에도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정권하에 만들어진 제도 및 기구들이 정권 교체 후에도 활동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언론 캠페인, 시민사회운동 촉진 등을 통해 무엇보다 일본 국민의 의식을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표 6] 하토야마 개별 정책 지지율

정책	지지	반대
연금 의료	48	28
경기 고용 대책	37	38
외교 방위	36	36

43) 일본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배포된다.

44) 쓰지나가 유타가 쓰쿠바대 교수는 최근 일본시민사회 단체의 모습을 영리섹터, 비영리섹터, 시민섹터, 혼합형 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①영리섹터는 경제단체, 농협, 노동조합 등 기업 또는 영리단체와 긴밀히 연결된 단체.

②비영리섹터는 정부부문과 가까운 복지, 교육 등 정부가 제공해 왔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사회단체.

③시민섹터는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주의 주장에 동조해 활동하는 단체.

일본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섹터보다 영리 섹터가 많음을 지적한다. (조용래, 『천황제 코드』, 논형, 2009.).

행정낭비 삭감	76	14
관료 개혁	69	18

자료: 아사히신문 11월 15일자

<조사방법> 14, 15일, 컴퓨터로 무작위에 작성한 번호에 전화하는 「아사히RDD」 방식으로,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에 조사했다. 세대용과 밝혀진 번호는 3598건, 유효회답은 2153명. 회답율 60%.

[표 6]日 총리 지지율 변화

	발족 직후 ----->	2개월 후
하토야마	68.7%	60.9%(1개월 후) 62.5%
아베	63.9%	47.7%
후쿠다	55.3%	41.1%
아소	44.6%	27.5%

자료: 산케이 신문(11월 24일, 1면 톱)

산케이 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가 21, 22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합동여론조사

앞의 [표 5]의 아사히신문의 보도와는 달리 산케이 신문은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이 여전히 6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3대의 아베, 후쿠다, 아소 내각이 발족 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비교 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문은 "과거 3대 각 정권이 발족 후 지지율 하락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은 하락을 멈추고 반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오카다가 발언한 ‘공동 역사교과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는 리더가 한·중·일 3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검정시스템의 재고와 비영리 섹터의 육성, 언론캠페인도 추진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의 지지기반 확보에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의 탄생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발전·보완 된 제2의 『미래를 여는 역사』의 발간은 책의 제목처럼 한·중·일 3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를 여는 바이블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V. 맺음말

탈냉전 이후 세계체제의 재편과정에서 사실상 한·중·일 3국은 역사적 문화유산에 기인하여 자신들 나름대로의 상호 다른 인식체계를 형성해 왔다. 근대 일본의 경험 속에서 동북아 지역은 ‘탈중국(脫中國)’을 위한 ‘서구화’와 ‘대동아(大東亞)’라는 포괄적 범주 속에서 개념화 되었으며, 중국은 ‘중화주의(中華主義)’라는 전통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였다.<sup>45)</sup> 이처럼 한·중·일 3국은 과거 역사적 근원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역범주를 엮어낼 수 있지만, 사실상 서로 판이하게 달라 공동체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형태로라도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의 협력과 필요성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45) 김동택, “문명을 위한 문명들, 그리고 동아시아 및 유교문명의 선택과 세계질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8호, 2002, p.147.

이 논문에서 한·중·일 3국 사이의 인식차이를 좁히기 위해 ‘공동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진정한 협력은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3국 국민들은 문화교류가 확대되어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로간의 문화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이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성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람들의 현실 인식과 괴리가 크다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한·중·일 3국의 공동 역사교과서 추진인 것이다. 여기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신뢰형성’이 우선시 되어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05년 『미래를 여는 역사』는 2002년 ‘새역모’의 움직임에 대항한 결과물이다. 3국간의 역사대화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형식적인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그러했듯이 역사연구는 그동안의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줄 시기이며 이 연구가 시작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 참고문헌

- 개빈 매크맥, 『중속국가 일본』, 창비, 2008.
- 이찬희 외 2명,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 한중일 역사 교과서의 비교분석』, 동재, 2006.
-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아 역사문제 통합본 - 주요현안분석』, 2007.4~12, 2007.
- 조용래, 『천황제 코드』, 논형, 2009.
- 연민수 외 7명,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 역사재단, 2008.
- 통일 연구원, 오명석 외 3명,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2004.
- 김영작 외 1명,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한국에서의 함의』, 한울 아카데미, 2006.
- 이승철 외 10명,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
- 롤프 비텐브로크, 「독일 프랑스 간 역사교과서 협의와 공동 교과서 편찬 경위 『역사 교과서 경험 공유와 동아시아 협력 모델 찾기』 2006.
- 이강국, “글로벌 임밸러스의 심화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경제”, 『국제지역연구』 11집 2호, 2007.
- 최태욱, “동아시아의 지역간 협력체제 추진을 제창한다”, 『창작과 비평』 37권 1호, 2009.
- 김종걸,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일본공간』 5호, 2009.
- Gilbert Rozman, "Internationalism and Asianism in Japanese Strategic Thought from Meiji to Heisei"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8.
- 김정인,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 역사교육연구.
- 박지현, 「민족교육에서 유럽 통합교육으로? - 프랑스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프랑스 연구 제 13호』.
- 김정인, 「동아시아 공동역사교과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 『역사교육』 101, 2005.
- 서현주, 「역사화애와 교과서」, 동북아역사재단.
- 김승렬, 「두개의 시선으로 바라본 관계사」, 『역사교육』 101, 2007.
-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교육 국제 심포지엄-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8.
- 양기웅, 「2009년 일본의 선거혁명과 ‘새로운 일본」, 『KNSI 특별기획』 27호, 2009.8.31.
- 이원덕,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KNSI 특별기획』 27호, 2009.9.2.

- 양기호, 「일본민주당의 외교적 선택: 미일동맹에서 동아시아외교로」, 『KNSI 특별기획』 27호, 2009.9.11.
- 남궁원, 「서평, 미래를 여는 역사」, 『역사교육』 2005.
- John Ikenberry,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American Relations with East Asia",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 2008.
- Takahara Akio, "Japan's Political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ing, 2004.
- 최태욱, 「동양평화론의 21시기적 계승;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10.22.
- 박번순, 「아세안+3 경제협력의 평가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9.10.22.
- 김인호, 「미래를 여는 역사, 민중의 삶을 통해서 그린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 『호서사학』 2005.
- 김동택, “문명을 위한 문명들, 그리고 동아시아 및 유고문명의 선택과 세계질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8호, 2002.
- 「중국반일 데모의 배경」 『世界』 2005년 6월, p.21~24.
- 日민주당 정책집,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 日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공식 홈페이지 <http://katsuya.net/>.
- 鳩山由起夫, 「私の政治哲学」, 2009.8.10.
- 동아일보, ‘한일관계평가조사 여론조사’ 2005. 6. 1.
- 조지소로스, 중앙일보 해외칼럼, “세계경제 새 판을 짜야 한다”, 2009.11.16.
- 중앙일보 사설, 오바마의 신아시아 정책 구상을 주목한다. 2009.11.16.
- 중앙일보, 「오바마가 찾은 아시아는 ‘어제의 아시아’가 아니었다.」, 2009.11.20.
- 「무서운 오바마」, 2009.11.24.
- 아사히신문, 내각지지율 62%, 낭비삭감 평가 76% 여론조사, 2009.11.15.
- 아사히신문, ‘하토야마 총리의 지지율 변화’, 2009.11.16.
- 산케이 신문, 총리의 지지율 변화, 2009.11.24.